

# 야권, 尹 방일 “굴욕·굴종 외교” 대정부 투쟁 가열

###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 민주 “폭탄주 마신 게 성과인가” 정의 “심판… 함께 싸워나가자” 국힘 “관계 정상 복원…尹 결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굴욕·굴종 외교’라고 규탄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굴종 외교, 호구 외교라는 국민 비판에도 기시다 총리와 화합주라며 폭탄주 마시며 마신 것이 외교 성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 큰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군사협력·강제징용 제3차 변제·WTO제소 취하 등 한 보따리 내주고 받은 것이 식사 대접 말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임 대변인은 “일반 기업의 영업사원이 윤 대통령처럼 영업했다면, 기업의 ‘오나’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서도 “진일을 넘어 송일”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일본 게이오대 연설을 지적하며 “연설 중 인용



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해찬 상임고문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오카쿠라 덴신은 한국 열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한 침략론자 발언을 인용하나. 역사 인식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속 의원들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5년째

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정권은 겁이 없다”며 “역사와 국민들의 따끔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일본은 최소한 사과도 없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앞드린 굴욕적 회담”이라고 질타했다.

야권은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

린 ‘망국적 한일 정상회담 규탄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 방일 행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택했다”며 “무도한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어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익도, 시민 존엄도, 동북아 평화도 팔아먹었다”고 작심 비난하며 “심판이 시작됐다. 우리 모두 힘내 함께 싸워나가자”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맞섰다.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정상 복원됐다”며 “민주당은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 정부를 비판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결단”이라며 “한일 양국 사이 해묵은 많은 문제가 해소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속셈은 뻔하다”며 “정쟁화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또 다른 방탄 방패로 쓰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 “尹, 日과 독도·위안부 논의했는지 밝혀라”

### 대책위, 오늘 정상회담 긴급좌담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해 “공개 못할 이유가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개해야 할 사안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오간 대화를 다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일본 정부도 정상회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외교 참사를 초래하고도 역사적 결단이라며 성과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회담 당사자인 일본 관방장관이 확인하고, 일본 공영방송이 보도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강변한다”며 “한국과 일본 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거짓말에 항의하지 못하느냐”라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일굴욕 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는 주일 대사 출신 강창일 전 의원이 맡는다. 강제동원 피해자, 외교안보 전문가 시각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발표한다.

대책위 김상희 위원장은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임기 후에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라며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KBS ‘뉴스9’에 출연해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기시다 총리가 해당 주제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 지역구 조정 및 축소 불가피 여야, 23일 전원위 구성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3개로 압축했다.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1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2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3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안과 2안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총 350명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지역구의 경우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뽑고,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는 방식이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정당 득표율)로만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 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연동형이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50%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개방형 명부제나 중복 입후보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내용은 세부 사항으로 기재했다.

3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인구 밀집의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들 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행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를 확대하는 것이나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이 난 건 전혀 아니고 합의된 게 아니다”라며 “논의의 틀을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 증원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선거구간 인구범위(2대 1)를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선 인구범위의 특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고 이 제도를 갖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 총의가 모여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소위에서 개편안을 심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 의결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99명 전원 토론에 부치기 위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연 뒤, 4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野,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강행… 단독 처리 불사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 학교 폭력 문제에 관한 청문회 실시 및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등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서울대 등 현장 방문, 9일 교육위 현안 질의 등을 거치면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실시 일정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며 “여당 동의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박지원, 수사의뢰 보도에 “원훈석에서 돈 받았겠다”

### “24일 재판 성실히 임할 것”

박지원(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은 19일 국정원 원훈석(院訓石) 교체와 관련,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 “제가 돈을 받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훈석 수사 의뢰에 대해선 그어



디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며 “저도 어떤 사안인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훈석에서 제가 돈을 받았겠다. 그 무거운 돌덩이를 제 안방으로 옮겼겠다”라며 “저도 모르는 사항이니 염려 말고 이런 입장을 참조해 달라”

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오는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첫 공판 출석에 대해선 “검찰 조사 과정에선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도 항변도 했으나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기에 제 의견은 변호인인 소송기 변호사에 의해 법정 내외에서 필요 시 변론할 것”이라며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게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